

# “가계부채·물가지원금 등 30조 규모 민생지원 추진돼야”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담회**  
민생·경제 위기 3대해법 제시  
경제라인 포함 내각 교체 강조  
“폭력적 국정운영” 尹 정부 질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해법을 내놓고 자신의 아젠다인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경제 3대 해법도 내놴. 이 대표는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추진, 경제라인 포함 내각 대폭 교체, 범국가 비상경제회의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긴급 민생 계획’엔 취약차주와 전·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원 대책과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담겼다. 또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물가지원금·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거 불안 해소책도 제안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이외의 관계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구상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넘어 주거,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만 8세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모두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 “기본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주거·금융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약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정부 태도가 2차가해”... 생존자·유가족, 진상규명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2차 공청회**  
생존자 극심한 트라우마 호소  
“이상민·한덕수 발언 무너져”  
진상규명만이 해답 한목소리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생존자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생존자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159명의 희생을 막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2차 공청회를 열고 당시 생존자, 유가족, 지역 상인의 진술을 들었다.

참사 당시 이태원을 찾았다가 인근 상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 김초롱 씨는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김 씨는 “저에게 2차 가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며 “참사 직후 이 장관의 브리핑을 보며 무너져내렸다.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을 눌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이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주 전 고등학생 생존자가 스스로 세상에 작별을 고했을 때, 스

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칠뻔 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를 찾았고 약의 용량을 늘렸다. 한 총리가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치유는 없다”면서 “결국 바뀌지 않은 사회와 쏟아지는 망언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비열함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친오빠를 잃은 조경선 씨는 참사 이후 정부의 무책임한 유가족 대응과 정보 공유 미흡을 질타했다.

조 씨는 “부실 수사와 수사 방지에 진절머리가 나고 치가 떨린다. 지금도 오빠의 행적을 모르고 우리 오빠를 수사해주는지 알 수 없다”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 씨는 “2차 가해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에게 있어 제일 큰 2차 가해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책임을 다했다는 정부와 공

무원 그리고 몇몇 일부 의원”이라며 “국가가 해선 안 되는 인간질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이 왜곡되고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간질로 입은 상처로 저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어떤 응급조치를 받았는지,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려줬다면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할 일도 전혀 없었을텐데 성숙하지 못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질을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국민제안’**  
민원·청원 2.5만건  
코로나·부동산 다수  
‘국민제안’ 보고서 첫 발간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정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영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 청원(32%)로 집계됐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5.0%, 50대 24.1%, 40대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신청 사례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주호영 “시중銀, 예대이율 합리적 설정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 은행에 합리적인 예대 이율

을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지난 10일 기준, 3.89~4.27%)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지난 10일 기준, 4.93~8.11%) 차이가 큰 데 따른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지난해 11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포인트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이 8%를 넘은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이 2021년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금융 당국이 이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 은행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